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치경



'권위적'(權威的)이라는 말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대개 "누구누구는 권위적이다"라고 평하면 위압적이고 고루한 사람을 뜻한다.

영상제작 프로젝트인 '캠코사건'으로 막대한 혐세를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

물론 총인비리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다. 하지만, 유죄 확률이 높아 보인다.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받는다는 계획이지만 국제분쟁이라는 특수성에 지방자치단체가 헤쳐나가기에 버거울 수밖에 없다.

최근 광주시정의 또 다른 권위 상실에 시민들의 실망은 더욱 크다. 바로 '어등산 리조트 개발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 수용'이 불러온 신뢰 추락이다.

신뢰 추락 어등산 개발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공사비 1000억 원대의 '총인시설' 비리로 공무원을 포함해 30여명이 기소됐다. 또 한미합작 첨단

운대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시에 기부하고 골프장(27홀)을 운영하는 경우 대종제(9홀) 운영수익을 사회복지·장학재단(시설)에 기부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본래 광주시는 법원이 처음 조정안을 제시할 때는 '어등산 개발의 핵심은 테마파크를 잘 만들어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시민의 휴식처 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어등산 개발이 27홀짜리 골프장으로 전락한 상태다. 스스로 원칙을 뒤집고 무책임한 행정의 선례를 남긴 것이다.

'어등산 사태'는 광주시의 행정능력마저 의심케 한다. 지난 2005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시행 주체가 수차례 바뀌는데 등여건이 크게 달라졌지만 불과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광주시의 근시안 또한 질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을 바탕으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어등산 개발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모습이 광주시정의 현주소라는 자탄도 나온다. 광주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시정 책임자가 교체됐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책임 회피를 받아들일 시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권위 바탕은 원칙과 실력

광주시가 수많은 이해관계로 점철된 어등산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아무리 속사정을 헤아려보더라도 어등산 개발은 '호랑이 그러리다 고양이 수준'에 멈춘 형국이다.

시는 뒤늦게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처음 계획처럼 종합 레저타운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의 기본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 꼬이고 만 어등산 개발을 어떻게 추스르는 지가 신뢰 회복의 관건이다.

어등산 개발 문제를 포함해 광주시정의 난맥상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바람은 간단하다. 행정의 '권위'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그 권위는 바로 실력을 바탕으로 원칙을 지키는 신뢰에서 온다.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시설

주민정서 외면하는 의정비 인상 안된다

지자체의 재정악화에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광주 5개 기초의회가 내년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는 전남 22개 시·군의회가 태풍 피해와 경제불황 등을 고려, 의정비를 동결한 것과 대조적이어서 지역민들의 시선이 뜨겁다.

의위원회의 심의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폐지 추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쟁점이라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이들 의회는 인상 명분으로 다른 시·도 지방의회와 비교해 역수가 적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광주시의회도 "유급보좌관제를 두지 못해 사설보좌관 지원 부담이 크데다 광역회계 가운데 의정비가 가장 낮아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인상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의정비는 각 지자체 입장에 따라 인상이나 인하할 수 있다. 또 원활한 의회활동을 위해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하고, 타 시·도의회와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면 설득력이 있다. 그렇더라도 극심한 경제난과 물가고에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민과 공무원 월급도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의정비 인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의정비를 인상해 현실화되면 2년 연속 올리는 것이며, 광주 북구의회는 경우 6년 연속 인상하는 셈이다. 게다가 시의회는 의정비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선이 굵지않은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 추진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억대 공금유용·사채까지, 막가는 경찰들

전남경찰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지난 7월 경찰 간부가 불법 대부업에 투자해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데 이어 최근에는 경찰관 2명이 수억 억대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치안을 맡아왔다는 게 분노마저 지킨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사무 감사에서 진도경찰서 A경위와 장성경찰서 B경사의 비위사실이 적발돼 대거 발령됐다고 한다. A경위는 수년간 진도 소재 경찰수련원의 기물 구입비용 등 2억2천만 원을 유용하고, 주유소 관계자들로부터 공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경사도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면서 1억 원가량 납부를 미루고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잇따르고 있는 경찰관 비리들 몇몇 사람의 기강해이로 치부해선 안 된다. 그동안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강 확립을 압박받던 뒤풀이 해왔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원점으로 회귀하는 '회색 행사'에 그쳤던 게 사실이 아닌가.

부디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위 내용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다. 지역민들도 이러한 정책 대안들을 개발하여 대선 후보들의 정책 인식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길 간곡히 호소한다. 〈행복문화사업단 단장〉

경찰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본분을 망각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경찰은 자성과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공권력도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전남경찰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만으로도 땅에 떨어진 공직기강과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불·탈법이 이 정도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저질 경찰관들이

이를 위해 비리 경찰관을 재발 방지 차원의 영구 퇴출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동안 송방방이 처벌이 비리의 악순환을 키우지 않았는가, 또한 보직 및 타경찰서 순환 등을 통해 비리 개선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쇠신을 하지 않는 한 비리 근절은 있을 수 없다.

은펜칼럼



류동훈

대선이 다가왔다. 과거에 호남은 대선 투표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왔다. 필자는 대선 기간 동안은 정치권의 귀가 열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표할 때의 전략적 선택을 뛰어넘어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 과정에 지역 의사를 전략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수도 일자리 창출 전략'이다.

대선 후보에 바라는 문화수도 일자리 정책

하면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에게 지역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줄 아시아문화도시 공약에 버금가는 큰 그림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어려진 환경에서 살아남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아시아문화도시'의 성과를 전국과 소통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도시' 전문 전국체널 케이블 방송국을 광주에 설립해야 한다.

이들 위해 첫째, 전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중문화는 방송을 통해 전국민과 소통할 때 가장 활성화될 수 있다. 우리 지역에 한정된 방송 문화의 현실에서는 경쟁력 있는 대중문화를 생산할 수 없다. 대중문화의 성공을 꿈꾸는 출연자, 제작자를 모두 서울로 몰려가고 있다. 지역의 대중문화생산자들은 소외받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둘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성과를 전국과 소통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도시' 전문 전국체널 케이블 방송국을 광주에 설립해야 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지역 전역에서 펼쳐지는 성과들이 자연스럽게 전국민과 소통이 가능해야 고립되는 사업이 아닌 국가적 사업으로 성공해 갈 수 있고, 지역 문화 산업 발전의 숨통을 틀 수 있다.

대중문화의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전국 규모 채널 방송 중 일부는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고, 그 대상은 문화수도 광주가 일 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상으로 KBS가 일차로 검토될 수 있고, KBS의 기능 중 예능과 창작중심의 KBS제2방송은 광주로 와서 전국의 문화 지방분권과 다양성의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식의 지방분권을 이루

셋째, 문화예술사회적기업 타운을 조성해야 한다. 광주는 인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가 있는 문화 콘텐츠 육성이 경쟁력 있고 이를 위해 문화예술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에 가장 유리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대중가요, 퓨전 국악, 연극, 영상, 관현악, 스토리텔링, 뮤지컬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함께 상주하면서 문화 상품 창조하고, 상상 공연장에서 돌아가며 작품을 올리면서 시민들과 함께한다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문화예술사회적기업 타운 그 자체가 광주의 독특한 관광 상품이 되고, 홍보도 잘되어 각종 행사 영업도 수월해 지고, 상상 공연장 관람객 모집도 각 사회적 기업들이 유기적 협력으로 효과 극대화될 수 있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신신 코너입니다.

기고



정근택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행복마을이 있기에 웃음꽃이 활짝

대 이전과는 많이 변화되었다. 우선 동네마다 새로운 신작로와 마을 안길에 단장되고 집집마다 가전제품이 있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농가주택이 오래되고 주거환경이 미흡하여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지붕을 개량하고 부엌을 개선하는 등 일부 내부수리 정도에 그쳐 생활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기 위해 1읍면당 1개소 이상의 '행복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코앞이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가을태풍으로 인명피해와 함께 많은 농수산물이며 시설물 등 재산상의 손실로 농어민의 시름을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

행복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새로 한옥을 10동 이상 지어야 한다. 도에서 4000만원의 한옥 건립 보조금과 3000만원의 융자금도 저리로 지원해준다.

이런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자식 내외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손자·손녀들을 멋스럽게 새로 단장된 한옥에서 재울 생각을 하니 그저 신나고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행복의 미소가 절로 난다.

지금까지 106개 마을을 행복마을로 지정하고 1512동의 한옥건립이 확정되었다. 그 중에 이미 절반이 넘는 835동이 입주 완료하였고 677동이 한창 공사 중이다.

전남도는 나후되어 있는 농어촌마을을 사랑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민들이 정착하고 도시민들이 돌아오는 마을로 바꾸

행복마을에서는 한옥체험 민박과 지역특산품판매 등으로 마을을 조성해 지금까지 4068백만원의 농의소득을 올려 잡사는 마을로 거듭나고 있고 주민들 스스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는 등 훈훈한 공동체 조성 노력에 매료된 538명의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1만8900여명이 귀촌 희망을 상담하는 등 살기 좋은 마을로 인식이 나면서 귀농·귀촌의 모델이 되고 있다.

100세 시대 축복되려면 농촌주민 삶의 질부터 높여야

장수(長壽) 만세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인지 요즘 TV에서도 9988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온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죽자는 의미의 9988이다.

라든 질문에 축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2.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아니라고나 그지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고향에서 농사 지으시며 농촌을 지키고 계신 부모님이 있는 필자로서는 이런 농민들의 설문조사 응답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건강하고 오래 사는 장수가 부담스럽고 싫다면? 그건 다름 아닌 농촌주민들의 삶이다. 농촌주민 중에 "100세 시대 축복인가"

농촌의 고령 농민들이 장수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장수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다. 그런데 이 꿈을 포

기하고 오히려 오래 살기 바라는 것인데 오늘날 농촌주민의 의식이라면 왜 그런지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건강과 생활비 같은 것이 걱정되고, 늙은 후 찾아올 아프고 빈곤한 삶에도 고통받는 게 두려워서 그럴 것이다.

농촌은 이미 심각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고, 노인들의 삶은 팍팍하다. 평생 고된 농사일과 농약 같은 것에 노출돼 관절적 질병이나 농부중 같은 것에 걸려 온몸이 성한 데가 없고, 자녀들도 도시에 나가 살다 보니 함께 어울려 살기 힘들다. 그저 농촌에서 외롭게 여생을 마쳐야 하니 농촌노인들 스스로 삶의

풀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이 무엇보다도 큰 성과일 것이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격언을 다 시금 되새기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농촌경제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불만이라고만 여겨진 농어촌마을에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다.

이곳이 바로 행복마을이요, 우리의 영원하고 1512동의 한옥건립이 확정되었다. 그 중에 이미 절반이 넘는 835동이 입주 완료하였고 677동이 한창 공사 중이다.

특히 수도권 초·중·고생들이 행복마을을 단체로 방문하여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체험하면서 농촌을 이해하고 자연을 벗 삼아 휴연하기를 기르고 체험을 통해 꿈

질이 떨어진다고 자포자기했는지 모른다.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의료혜택 부족, 가족 해체에 따른 외로움,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농촌지역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국가는 지금까지 우리 농촌을 지켜온 농민, 그리고 앞으로 농촌을 지켜 낼 젊은층들이 농촌에서 사는 것과 장수하는 것 자체를 싫어할 만큼 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갖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농민들이 우리 농촌을 등지거나 기피하는 일, 그리고 자살하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김성욱·목포시 대방동

無等鼓 (No Equal Drum) advertisement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text about a film festival and social issues.

광주日報 (Gwangju Ilbo)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